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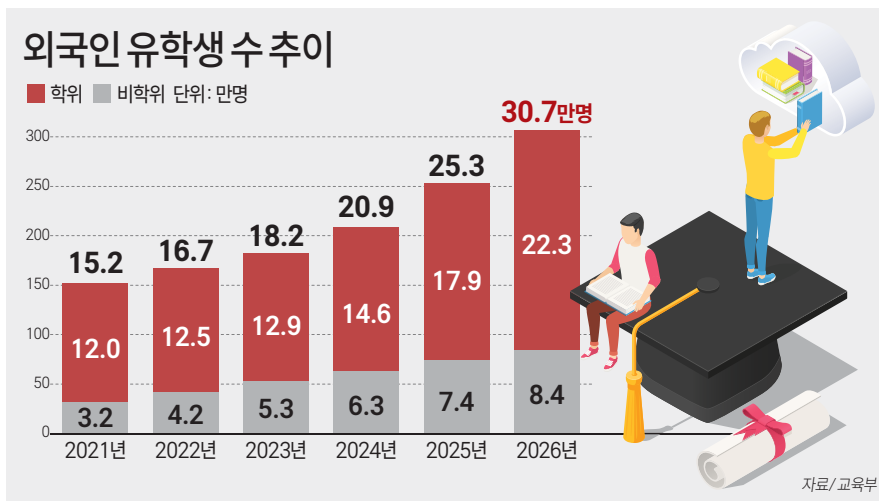
부실대학,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교육·관리 기준 강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미인증·경영위기대학 제재 강화
유학생 30만명시대… 양보다 질로
첨단산업 등 우수 유학생 지원 확대

앞으로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평가도 강화돼 한국어 등 공인언어능력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학업·생활 지원도 운영 실적이 아닌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부실대학 유학생 모집 제한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세웠던 2027년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유학생 수는 2023년 18만2000명에서 2024년 20만 9000명, 지난해 25만3000명에 이어 올해



30만7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대학의 교육·관리 역량과 유학생의 취업·정착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선정

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인 5단계 '비자심사정밀대학'으로 분류한다. 대학의 교육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해 사실상 신규 모집을 막는 방식이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위과정 운영 대학 340곳 가운데 유학원을 활용한 대학은 149곳으로 43.6%에 달했다. 유학생 8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7.8%가 유학소개업체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일부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나 허위 학위 제출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과 유학원 간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면 대학이 유학생 명의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표준협약서에 담긴다. 해외 학위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이공계·우수 유학생은 지원 확대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초청 장학생(GKS)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재학생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2027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이공계 석사 장학생은 박사과정까지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 우수자에게는 성과

격려금도 지급한다.

2027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실적을 낸 학과를 연간 10개 이내로 선정한다. 인증학과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산학협력,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인증학과는 2년마다 갱신 여부를 점검해 전체 30개 이내로 관리한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2027년부터 국내 채용 절차와 직종별 정보, 직장문화 등을 담은 취업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관심 지역·직군·채용 형태에 따라 신규 채용공고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교육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초광역 인재육성’ 6곳 선정… 4년간 600억

(모델당 최다)

교육부, 지역맞춤 인재 1.4만명 육성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모델 선정

교육부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모델 6곳을 공개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4년간 모델당 최대 600억 원을 투입해 1만 4000명의 지역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의 '초광역 성장 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이다. 기존 시도 단위였던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경제권역 단위 체계로 넓혔다.

교육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모델로 ▲경남대(경남)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 ▲국립금오공대(경북) ▲국립목포대(전남광주) ▲단국대(충남) ▲우석대(전북) 등 6곳을 선정했다. 각 지방정부가 제안한 19개의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 반영 여부 ▲정부 여건 마련을 통한 인재양성 체계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간 공조의 명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매가존(경남·인천·강원), 유한양행(충남·경기·대구), SK하이닉스(세종·충북) 등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개 모델에 산업별 교육·연

구·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1만 4000명 규모의 지역 맞춤형 첨단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주관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남대는 '제조 인공지능전환(AX) 및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서 4년간 26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국립금오공대는 '반도체첨단소재부품 및 인공지능(AI) 제조로봇' 분야 3000명, 국립목포대는 '재생에너지' 분야 1500명을 키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반도체' 분야 인재 2800명을 길러낸다. 우석대는 '수소 및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단국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각각 2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모델별 매년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4년 동안 받는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수능 지원자 55만1864명… 'N수생' 32%

재학생 줄고, 졸업생·검정고시 늘어
사탐 선택 69.9%… 쏠림현상 심화

재학생 수가 줄어든 가운데 졸업생의 수능 도전은 크게 늘면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N수생'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쏠림이 커지고,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러'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전년도 55만4174명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6506명(4.4%) 줄었다.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1%에서 올해 64.4%로 2.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지난해

15만9922명보다 1만3784명(8.6%) 증가했다.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8.9%에서 31.5%로 2.6%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2만2767명으로 412명(1.8%) 증가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지원자를 합치면 19만6473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35.6%에 달한다.

선택과목에서는 수학 영역의 미적분·기하 선택자가 전체 수학 지원자의 35.1%를 차지했다. 수학 영역 지원자 51만8939명 가운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33만6539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 7255명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36만7073명으로 69.6%를 차지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7만 5036명(14.2%)에 그쳤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한 수험생은 8만5146명(16.1%)이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비움 여행지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경기관공공사, 가을 여행지 6곳 추천
역사, 자연체험 등 이색 여행지 눈길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의 속도를 늦추며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여행지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와 경기관공사는 한옥과 숲, 수목원, 생태공원, 역사·문화공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움 여행지' 6곳을 소개했다.

수원화성 성곽 안쪽 남수동 골목길에는 검은 기와와 단정한 담장이 이어지는 한옥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8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남수현(南水軒)'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에 현대적인 편의를 더한 한옥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수원화성 성곽길을 걸은 뒤 차와 책, 전시를 함께 즐기며 쉬어가기에도 적합하다.

포천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중심부에 자리한다.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된 이후 보호돼 온 숲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온대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 잣향기푸른숲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600m에 자리한 산림치유 공간이다.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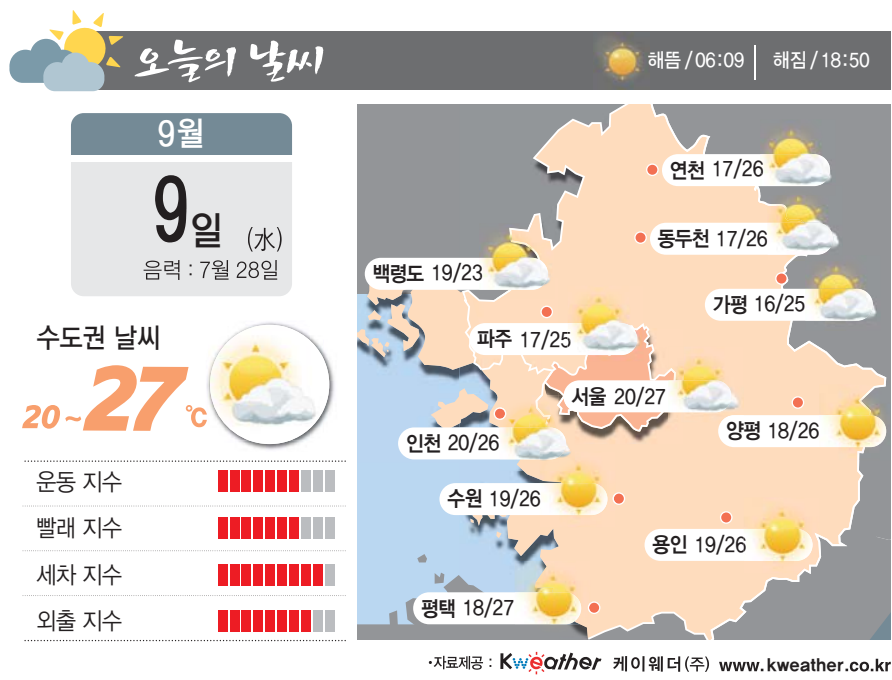
포천 국립수목원.

/경기관공공사

국내 최대 규모로 분포해 숲길을 따라 걸으며 울창한 잣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성 마항리평화기념관, 부천 자연생태공원,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등 숙박과 산책, 자연 체험부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공간까지 여행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홍콩 초·중·고교 9월 개학 직후 3명 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사진 뉴시스
▲화웨이, 中 반도체 '자립' 이끈다…노광장비·핵심부품 국산화 속도

▲트럼프, 이틀간 SNS 80여건 '폭주'…심·정치 공세·자화자찬 쏟아
▲네팔 '빙하 홍수' 발생 15일째…韓 긴급구호대 도보 수색 나선다

▲캐나다, 대미 맞불관세 발효…美제품에 최고 50% 보복 관세
▲이란, 美 압박에 군사적 긴장 고조…“전면전 아닌 단계적 확전 가능성”